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병

자본주의가 키운 시한폭탄이 폭발하다

관련 기사 5면

사우디 석유
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
이란 위협 중단
하라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불탄 경질

3면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6면

미국 GM 자동차
노동자 파업

2면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을
지지하자

12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8면

미국 GM 자동차 노동자 5만 명, 구조조정 반대 파업!

9월 15일 자정(현지 시각)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동자 약 4만 6000명이 9개 주 52개 공장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GM 조합원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선 것은 2007년 이틀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GM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직면했었다. 미국 정부는 GM의 파산을 막으려고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그것은 사측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대대적인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등 고통을 강요 받았다.

이후 GM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회생했다. 지난해에만 약 80억 달러(한화로 약 9조 50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런데도 사측은 또다시 노동자 약 1만 8000명(북미 전체 GM 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방아쇠가 된 것은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다. 사측은 2020년까지 오하이오·미시간주(州)에 있는 GM 공장 네 곳을 폐쇄한 후 새 공장을 지어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4년이나 지어진다는, 그조차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계획은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 GM 노동자들이 “공장이 어려울 때 우리는 희생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공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까닭이다.

그에 더해, 노동자들은 2008년 이후 빼앗긴 임금·노동조건 회복도 요구



일자리,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파업

하고 있다.

특히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는 이중 임금제에 대한 분노가 큰데, 신규 노동자들이 이 제도 때문에 임금이 반토막 났을 뿐 아니라 연차가 연 3일밖에 보

장되지 않는 등 매우 열악한 처지로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 신규 조합원들이 다수 참가한 이유다.

건강보험료 사측 부담금이 삭감된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국민 대상 건

강보험 제도가 없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다.

UAW 지도부는 그간 밀실 협상을 추진하고 GM 파업 직전인 9월 13일에 크라이슬러와 포드에서 양보 교섭을 타결하는 등 투쟁을 한사코 피하려 했다. 그러나 GM에서는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분노가 커서 파업을 선언해야 했다. 미시간주(州) GM 비정규직·경비 노동자 수백 명은 지도부가 파업 선언을 하기도 전에 파업에 돌입했다.

고무적이게도 투쟁 열기는 GM공장 담배락을 넣고 있다. GM 파업 돌입 직후 미국 운수노조 ‘팀스터즈’ 조합원 약 1000명은 GM 파업에 연대하며 GM 완성차 수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부문을 뛰어 넘는 소중한 연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GM 노동자들은, 사측이 9월 17일(현지 시각)에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 놓았는데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은 개입하지 않겠다며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는 태도야말로 노동자들을 더 분통 터지게 하는 처사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오하이오·미시간주(州) 등 제조업 강세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했는데, 바로 그 오하이오주(州) 로즈타운에서 2019년 3월에 GM 공장이 폐쇄돼 노동자 약 1만 4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반면 ‘민중적 사회주의’ 열풍을 일

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는 파업 직후 트위터에 연대의 글을 남겼다. “GM의 탐욕에 맞서 일어난 UAW 조합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날, 미국 민주사회주의당(DSA) 소속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도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쟁취하려 용기 있게 파업에 나선 5만 GM 노동자들의 파업은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다”며 연대를 보냈다.

미국 GM 노동자들의 분노는 한국 GM 노동자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GM 사측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며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수천 명을 해고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난 2년여간 노동자들은 법인 분할,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등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GM 노동자들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GM 파업 상황에서 한국GM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저히 하고 사측과 합심하면 … [GM 사측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미국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때 한국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압박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사측을 물러서게 할 방법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측을 타격할 힘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GM 파업이 이번주를 넘겨 이어지면 3분기 예상 순이익이 1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투쟁해 GM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기를 바란다.

김준호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법무부는 8월 21일 결혼이민제도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부 개선된 내용도 너무 제한적이거나 단서가 달려 있다.

취약한 처지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은 체류 연장을 위해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남편의 사실상 신원보증이 필요했다. 신원보

증제도가 폐지됐다지만, 이주여성들은 현실에서는 남편의 동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후에도 체류를 원할 경우, 이혼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언어·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이 입증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폭력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자유롭게 이혼하기도 어려운 처지로 내몰려 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결혼이주민이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며(당연한 조치다), 우선 연장을 허가한 다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선 허가, 후 조사 방식).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혼인의 진정성’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위장결혼’이 의심

되면 ‘선 조사, 후 허가’하겠다고도 한다. 또, 이혼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주겠다고 한다.

여전히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그동안에도 ‘혼인의 진정성’ 조사에서 한국인 남편이 이주여성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비자 연장이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

정부는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적발하려면 이런 식의 ‘혼인 진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조치는 이주여성을 남편에게 종속시켜 전체 결혼이주여성을 고통으로 내몬다. 본국의 가난을 벗어나거나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한 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혼 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증 과정을 돕는 옴부즈맨(민원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그쳤다. 입증 책임 자체는 여전히 결혼이주민에게 있는 것이다.

귀화 심사 과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심사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이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보장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

이중 굴레

정부는 자녀 양육이나 혼인 관계 지속 여부를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과 연동시켜 왔다. 결혼이주여성은 이혼 시 남편의 귀책을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를 연장할 수 없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귀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귀화적격시험이 면제된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이혼하더라도 체류할 수 있고, 귀화심사 기간도 최대 18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개정안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

는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3년)로 연장해 주고 체류 실태조사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이라는 자본주의 가족 제도에 충실하게끔 강제하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적 차별과 통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과 가정 폭력 피해의 한 배경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가족 모델과 여성상이 도전받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히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이주민이라는 취약한 처지 때문에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천대에 반대하고 한국에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국적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가정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임준형



드론 공격을 받고 불타고 있는 아람코의 정유 시설 중동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 최악의 위기로 치달고 있다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이원웅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정유 시설이 공격당했다. 이 공격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의 절반에 차질을 줬다. 유가가 한때 20퍼센트까지 폭등했다. 이는 걸프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싸우는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럴 리 없다며 이란을 공격 주제로 지목했고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누가 공격을 했느냐와 관계없이 중동 상황은 더 위험해졌다.

이번 공격에 대응해 트럼프는 “발포 준비” 운운하며 군사 개입을 시사했다. 6월 말 이란이 무인기를 격추했을 때 지나친 대응이라며 폭격을 실행 직전에 취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진작로 폭격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된 말도 했다.

이를 그저 트럼프의 충동적 개성과 변덕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태도는 중동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만 중동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없는 세계

패권국 미국의 처지를 반영한다.

트럼프는 9월 초에만 해도 예멘의 후티 반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추진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란 대통령 로하니와 유엔 총회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고, 트럼프는 중동에서 발을 빼기가 더 어려워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격이 있고 며칠 후 미국 국방부 관료들이 트럼프에게 대응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는 상황에서 … 이란과 유혈 충돌”을 감수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다. 즉, 진정한 위협인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연히 이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으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 관료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병력을 증파해서 압박을 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중동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이상 한동안 중동에서는 긴장이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석유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됐거나,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하기 좋아졌다는 등, 상황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관점이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미국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호전적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경질한 것이 여러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물론 볼턴의 경질은 미국의 상대적인 약화와 딜레마, 패권 유지의 해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의 갈등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그 딜레마 속에서 위험한 모험을 택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경쟁 논리와 중동 내 강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경질하자, 영국의 국제관계학자 로렌스 프리드먼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존 볼턴이 불쌍하게 보일 날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없었다.” 반면 미국의 몇몇 진보 인사들은 트럼프 반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볼턴의 실각을 실제로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볼턴은 지난 공화당 정부, 즉 조지 W 부시 정부에서도 각료를 지내다 경질된 바 있다. 당시 볼턴은 이라크 침공을 가장 강경하게 옹호한 자들 중 한 명이었다. 이라크 침공은 부시가 지목한 “악의 축”에 대한 광범한 공세의 일환이었는데, 볼턴은 이라크·이란·북한뿐 아니라 쿠바·리비아·시리아로 공격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은 결코 이뤄지지 않았다.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이 유례 없는 참패를 맛봤기 때문이다. 점령에 맞선 [이라크인] 무장 저항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했던 정당들은 시아파 무슬림에 기반이 있었다. 이라크인 다수는 시아파 무슬림이었고 이전 사담 후세인 정권 하에서 탄압받았다.

그런 정치인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여러 연계가 있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맞선 무장 저항을 지원했다. 이란과 8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인 사담 후세인을 미국이 치워 준 덕분에 이란의 영향력은 저절로 커졌다.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더한층 키울 수 있었다.

근본적 모순

그후 트럼프가 등장한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근본적 모순과 씨름해 왔다. 트럼프는 전임자 버락 오바마처럼 한사코 또 다른 지상전에 말려들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하는 두 강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떠밀려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나섰다. 그리하여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이런 “최대 압박”에 이란이 굴복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전략·정보 웹사이트 〈스트랫포〉의 논평처럼 “이란의 힘은 약할지 몰라도 이란의 전략은 성공적이다.” 이란의 전략은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핵협정에 조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압박하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과 설비를 공격해 자신이 세계 에너지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정유 시설 두 곳에 대한 조정밀 무인기 폭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절반 이상을 마비시켰다.

〈스트랫포〉는 이렇게 지적했다. “결국 이란이 여름에 펼친 버랑 끝 전술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결실을 맺었다. 첫째, 이란은 자신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당한 군사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둘째, 미국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트럼프가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 확히 드러났다.

“셋째,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봄비는 무역 항로[호르무즈해협]를 위협했음에도 유럽 열강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전략에 더 긴밀히 공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랑스 정부가 미친듯이 외교에 매달렸다. 이는 이란 외무장관 자바드 자리프가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담을 깜짝 방문해서, 이란의 원유 재고를 담보로 150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를 이란에 제공하겠다는 프랑스의 제안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반목

그러자 이제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란 대통령 로하니에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매달렸다.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과 거둔 ‘성과’를 재현하려 했다. 로하니는 트럼프가 그럴듯한 사진을 원한다면 포토샵으로 물을 합성하면 될 것이라 조롱하며 대화 제안을 일축했다. 이란은 제재 중단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볼턴은 부시 식 정권 교체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볼턴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반대했고, 6월에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자 걸프 지역에 지상군 12만 명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히려 자신이 지시한 보복성 폭격을 취소했다.

볼턴은 또 다른 뉴스거리를 위한 트럼프의 계획에 반대한 것 때문에 경질된 듯하다. 트럼프는 미국이 패배한 또 다른 전쟁, 즉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 탈레반 지도자들을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려 했다. 이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볼턴의 실각은 대(對)이란 매파에게 쓰라린 패배다.

다시 한 번 〈스트랫포〉를 인용하면, 이란의 위험천만한 전술은 “트럼프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트럼프에게 대통령으로서 잊을 수 없는 악몽을 안겨 줬다. 미국이 또다시 이슬람 세계에서 군사적 수렁에 빠져드는 것 말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아직도 이라크전 패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72호
번역 김준효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것도 무시 못 할 과제다. 일본에 함께 맞선다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말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반대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청해부대 강감찬함은 아직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만

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강감찬함은 출항 전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을 펼칠 채비를 갖췄다. 정부는 파병에 대비한 훈련까지 실시했다. 최근 JTBC는 군 당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청해부대가 수행할 임무를 규정하고, 이란 정규군과의 충돌을 예상하며 분석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을 폭로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 가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강감찬함이 아덴만에 있는 것부터가 문제다. 아덴만은 서방의 지원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예멘과, 제국주의 열강에게 유린당한 소말리아 사이에 있다.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파견된 청해부대는 서방 세계가 이곳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일조해 왔다.

강감찬함이 있어야 할 곳은 아덴만도, 호르무즈해협도 아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돌리려 한다

사진 출처 민주당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딛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면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쥔 검찰이 공식·비공식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며, 재판도 하기 전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흔히 무장 해제시켰다. 이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 남용(또한 피의자 인권 침해)으로 지목돼 왔다. 좌파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나마 언론이 동등하게 반론권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맥락도 중요하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처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피의자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개혁이 아니라 그 반대일 수밖에 없다. 사소한 절차 개선조차 그나마 추진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수사와 재판, 판결, 행정조처 등)이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걸 잘 안다.

세종호텔 노조 간부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건드릴 수 없는 원칙처럼 통용되지만, 노동자에게 유리한 톨게이트, 현대차 비정규직 등에 대한 판결은 사용자가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계급 차별은 절차 개혁의 한계를 보여 줄 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같은 핵심 권력기관들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이 기관들은 기업인들의 경제 권력을 비롯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보호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기구이다.

체제 정당화

이런 기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나 자기네 권력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특별히 설득해야 할 때만 쓸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수사 결과와 판결을 내놓는다. 촛불 운동과 박근혜 일당 수사·재판(탄핵), 사법 농단으로 정당성 위기를 겪은 후에 나온 낙태죄 헌법불합치,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판결 등이 그런 사례다.

모든 판결이 예외 없이 기득권층과 사용자 편향적이면 노동계급은 이런 기관들(나아가서는 국가 자체)을 결국 불신할 테고, 그런 정당성 위기는 안정적인 계급 지배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1987년 6월 민중 항쟁과 7~8월 노동

자 대파업을 분수령으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조직이 급성장한 몇 년을 거치면서였다. 지배 계급이 더는 강권 통치에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기관이 마치 개과천선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창출한 결과이다. 하지만 지배자들은 이런 마지막한 양보를 체제를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 왔다.

결국 국가 기관들을 개혁한다는 것은 그것의 성격을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기존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임명을 지지한 정의당·민중당은 그렇게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식 진영논리와, 자본주의 국가를 진보적 사회 개혁을 위해 고쳐 쓸 수 있다는 개혁주의 정치의 결함을 보여 줄 뿐이다. 이것이 현실적인지 살펴 보자.

이너서클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계급의 안정적 사회 지배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무장한) 정치조직이다. 그러므로 검찰·경찰은 물론이고 법원(사법부)도 노동계급에 이롭게 바꾸는 것(진보적 사회 개혁)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다.(국가정보원 같은 보안 경찰과 군대 같은 기구들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곧 이 기관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같은 기관들이 인원 규모가 작음에도 조 단위의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나,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 55조 원 중 경찰청 예산이 11조 원에 이르는 것(인원 15만 명)을 봐도 이 기관들의 정치적 비중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기구들을 통제하는 그 상부 구성원들은 매우 엄격하게 소수만 선발되며, 이들은 선발과 동시에 엘리트 취급을 받으며 지배계급으로 이어지는 인적 연결망(이너서클)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물론 그 연결망 내부에서도 족벌, 학벌을 따지며 서열화가 생긴다.) 이런 질서 덕분에 각 권력기관들이 사회 전반을 관장하면서도, 정작 그 핵심 구성원들은 폐쇄적인 이너서클을 이루고 상명하복으로 권력을 공유하며 그들만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검찰, 법원 등의 막강한 권력이 바로 이들의 “신성가족”을 묶어 주는 울타리이자 힘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기관들의 최고위 대표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여 주기와 면피용일 뿐이다. 별 일 없다면 대중의 진정한 여론은 임명 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체 인사권이 보장된 이유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지방검사장(D.A.) 선출제의 사례를 봐도, 검찰의 억압적 성격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법원이 방해하고 반격한 것 등을 보아도 이 기관들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상적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가 검찰 권력을 비난하는 것에 진보적 진지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권은 조국 일가에 대한 대검찰청 특수부의 수사가 검찰 중립을 벗어난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립적 행위였을까?

2016년 말 당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를 범죄 피의자라고 공표했던 것도 검찰 특수부였고(그 공표가 문제였다는 뜻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을 주도한 것도 특수부 출신자들이었다. 이에 대한 문재인인의 보은 인사가 바로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이었다. 그런데 그 칼끝이 자신들을 겨누자마자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혈통기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내세우는데, 바로 그 공수처가 할 일이 바로 조국 일가 수사 같은 것이다. 그러니 여권의 반응은 그들 자신의 공수처 설립이 그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검찰2’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같은 이유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위 검찰 개혁을 정당화할 유일한 명분은 선출된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찰(경찰)에게서 체제 수호 기능을 뺏을 리는 없다.(이 기관들의 막강한 힘은 자신들 외부의 세력, 특히 체제 반대 세력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검찰 권한을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 주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은 피억압 대중에게는 억압 기구의 수만 더 늘리는 셈이다.

이 점은 다음 사례들과 연결시켜 보면 더 뚜렷하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 개혁이라고 포장한 대검찰청의公安수사부 폐지가 이름만 바꾼 채 노동계 수사부서는 남겨놓은 것, 경찰 보안수사대를 사실상 지휘하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내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점 등 말이다.

따라서 권력기관들이 현 시스템 안에서 합법 수단을 통해 민주적으로 개혁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이다. 오히려 이 기관들의 형사·사법 기능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의식적으로 보호된다.

이 기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견제받는 것은 오로지 국가기구 밖에서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시스템의 작용을 위협할 때뿐이다. 진보파가 공상적 개혁을 추구하기보다 계급 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의 흑역사

올해 6월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꼴찌를 차지했다(2.2퍼센트).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한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군정기 이래로 정치 권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제 수호에 앞장선 억압 기구였다.

반민주 억압 기구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두 차례나 자행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짜고 거짓 기소를 했다. 검찰은 1986년 부천시 경찰관 문귀동이 대학생 권인숙 씨를 성고문한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해 공안 탄압을 하기도 했는데, 그 상징적 사건이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이라 불리는 1991년 유서대필 사건이다.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하자, 검찰은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 줬다며 자살 유도 또는 방조의 누명을 씌웠다. 당시 불붙던 반정부 투쟁을 잠재우려는 아비한 술책이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도 송두율 교수, 강정구 교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탄압을 했다. 구속노동자 수도 해마다 늘어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만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고발한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고, 강제 철거에 항의하다 가족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

검찰은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야단법석을 떨며 기소했지만, 보수적인 대법원조차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부실 수사한 검찰은 세월호 운동 탄압 기구로 명성을 날렸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기세와 규모에 놀려 검찰은 박근혜에게 일시 반기를 들었지만 지금도 검찰은 매우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국가 기관이다.

문재인인의 검찰은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지만 그도 잠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자 기소, 노동계약에 항의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등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권력자 봐주기

반면에 검찰은 지배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1987년 대투쟁 여파로 시작된 ‘5공 비리 수사’는 대부분 혐의 없음,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호지부지됐다. 1994년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광주 학살 수사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었다.(항의 운동이 거세지자 결국 재수사해 기소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김대중 아들을 포함해 여당 의원들, 국정원 고위 간부, 검찰 간부 등이 연루된 ‘3대 게이트’가 잇달아 터졌는데 검찰의 축소·은폐 시도가 들통나고, 당시 검찰총장 신승남의 동생이 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노무현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견희 처남 홍석조에게 법무부 검찰 국장을 맡기고, 삼성의 온갖 비리를 눈감아 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황교안은 비리를 폭로한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을 오히려 기소했다.

이명박의 BBK 의혹을 비롯한 각종 부패를 적당히 덮은 것도 검찰이었다.

2017년과 2019년에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사건들에서 의도적인 무성의 수사로 진실을 묻어버리며 실체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김지윤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당시 기사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발병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김무석 건국대학교 수의대 학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파주에서 확인됐다. 국내 첫 발생이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9월 18일 오전에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최소 4일에서 최대 19일(평균 7~10일)이다. 따라서 파주 농장에서 발병하기 약 일주일 전에 돼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이다. 이번 발생이 즉각 확대될지 몇몇 농가에서 멈출지는 앞으로 2주간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경로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남하했을 수 있고, 태풍 링링이 질병 전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식품을 통해 유입됐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국제화되면서 지역적 풍토병이 세계적 전염병이 될 위험성은 커졌다. 그러나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이 지속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수준의 협력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에 북한과 협력해 그 동향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동참하는 대북제재들 때문에 가축 방역 관련 협력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첫 발생을 계기로 중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중국에서 사육되는 돼지(2016년 기준 약 4억 5700만 마리)는 세계 전체 돼지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해졌고, 돼지고기 가격은 인상됐다.

중국 정부는 올 6월 중국의 돼지 사육마릿수를 약 3억 4700만 마리로 추정했다. 1년간 약 1억 1000만 마리(25.8퍼센트)가 사라진 것이다. 올 8월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은 1년 만에 46.7퍼센트 상승했다.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가격도 모두 11.6~12.5 퍼센트 상승했다. 가격 부담은 중국 노동자와 민중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대 돼지 소비국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퍼센트 증가했다.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는 중국의



체제의 이윤 논리와 국가 간 경쟁이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하게 한 걸림돌이 됐다

고기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육류 수입국들에서 고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퍼지면 손쉽게 박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향은 상당히 오래갈 것이다.

전반적인 단백질 공급 가격이 오르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10년 넘게 확산 중인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약 100년 전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된 풍토병이다. 아프리카의 야생멧돼지에게는 큰 증상이 없지만, 사육돼지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려면 야생멧돼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질병이 아프리카를 벗어나거나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뛰어 발병하는 데에는 인간의 구실이 결정적이었다. 인간은 이 질병에 직접 걸리지는 않지만, 감염된 사육돼지나 돼지고기의 부산물을 이동시켜 질병을 전파하는 구실을 해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도 질병이 퍼지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가열하지 않은 돼지의 고기와 부속물에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다. 냉장육에서는 100일 넘게 생존하며, 냉동육에서는 1000일 넘게 생존한다. 이 때문에 장거리 수송이나 장기간 보관에도 쉽게 사멸하지 않고 감염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량이 늘어나고, 자본주의

가 세계적 체제로 발전하면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위험이 현실이 된 첫 사례는 1957년과 1960년 포르투갈에서의 발병이다. 1960년에는 포르투갈을 넘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 전파됐다.

2007년에 벌어진 두 번째 확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서유럽, 러시아, 중국, 동아시아까지 10년 넘게 질병이 퍼지고 있다. 첫 확산 때보다 질병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 범위도 더 넓다.

특히 러시아는 국토가 동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걸쳐 있고 최대 돼지 생산국인 중국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질병의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2018년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졌고, 올해는 몽골과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질병이 퍼졌다. 현재 유럽 나라 15곳, 아시아 나라 8곳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중국 자본주의는 어떻게 질병을 퍼뜨렸나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07년 유럽의 조지아에서 3000킬로미터 떨어진 체코까지 전파되는 데 11년이 걸렸는데, 중국에서는 북부의 선양에서 약 2100킬로미터 떨어진 상해 남부까지 고작 3주가 걸렸다.

중국에서 질병의 전파 속도가 이토

록 빨랐던 데에는 지역적 불균등성과 시장에 내맡겨진 돼지고기 공급 체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첫째, 중국 사육돼지의 52퍼센트는 소규모(30두 미만) 농장에서 사육된다. 이런 농장은 집 가까운 곳에서 돼지를 기르기 때문에 '뒷마당 농장'이라고 불린다. 이런 농장은 차단 방역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돼지를 잔반을 먹여 기른다.

둘째, 돼지의 생산과 공급이 완전히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중국 내에서는 지역별로 돼지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서 돼지 값이 비싼 지역으로 2000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염된 돼지의 피로 만든 사료도 전파 경로가 됐을 수 있다. 비용을 이유로 규정을 어기고 섞여 8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열처리를 함에 따라 바이러스가 사료에 포함돼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보고한 야생멧돼지의 발병 사례는 단 한 건뿐인데, 야생멧돼지에서 질병 발생이 실제로 적었을 가능성보다는 사실상 야생멧돼지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적했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박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경제 위기와 국제적 경쟁은 중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많은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더 투자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 질병이 소비자 물가 인상 등 자본주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뒤늦게나마 여러 국가가 나름으로 대처하

고 있지만, 이 질병의 특성상 단기간에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노동계급이 고통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동물 전염병의 확산은 국가 간 경쟁·갈등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은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는 와중에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면 질병 정보에 대한 공유도 줄어들고,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협력도 요원해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질병 같이 인류가 협동해서 해결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경쟁이라는 속성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킨다.

자본주의가 질병 통제력을 크게 잃어 버리는 때가 전쟁의 시기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국가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치달을 때 생길 위험은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불안정하고 무계획적인 시장 경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가 필요하다.

노동계급은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할 잠재력도 갖고 있다. 노동계급의 투쟁이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도 발전해야 한다.

* 이 기사의 전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김영익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약속했지만,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가 8월 31일에 이어 9월 15일 집회와 행진(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도 불허했지만, 9월 15일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여전히 대다수 홍콩 사람들은 송환법안 폐기 이상의 진보를 원한다. 직선제 실시, 경찰 폭력에 대한 조사, 캐리 램 사퇴 등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때까지 거리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여긴다.

물론 캐리 램은 송환법 개정안 철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대중 시위와 노동자 파업에 부딪히자 그런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캐리 램은 송환법안 폐기 여부를 입법회(의회)에 부쳤다. (본지 297호에서 필자가 캐리 램이 송환법을 철회했다고 쓴 것은 단정적인 보도였다.) 그는 입법회에서 송환법안 폐기 약속이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종 결정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따라서 그새 정부가 시간을 벌면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시위대의 다른 핵심 요구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콩 사회주의자 램치렁은 9월 17일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캐리 램이 진짜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위대에] 양보하기는커녕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 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시위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탄압했다. 시위 참가자를 폭행하고 연행했고, 최루탄· 고무탄으로 대열을 공격했다. 또, 시위 참가자를 색출해 체포하려고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쏘았다. 시위대는 돌맹이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저항했다.

9월 16일 홍콩 경찰대원협회 주석은 “폭도”가 경찰한테 화염병을 계속 던진다면 경찰이 “실탄”을 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소규모 ‘친중’ 시위,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공격하는 진짜 깡패들은 계속 비호한다.

이런 협박이 시위대에게 쉽게 먹히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당분간 시위를 비롯한 대중 행동이 지속될 것 같다. 학생들은 동맹 휴업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10월 1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호소가 반향을 얻고 있다.

홍콩 운동은 지금까지 100일 넘게 지속되며 노동계급 사람들과 평범한 대중이 다수로 참가하는 대중 투쟁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홍콩 대중이 보여 준 자발성은 정말 대단하다.

흔히 홍콩 운동을 가리켜 “지도가 없는 운동”이라고들 한다. 이는 자발성 개념에 사로잡힌 착각이긴 하지만, 분명 운동 참가자 다수는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처럼 기성 정치 세력을 그리신뢰하지 않는다.



헬멧, 고글, 방독면 등이 시위 참가자들의 필수 아이템일 만큼 경찰 폭력이 극심하다

겉보기로는 순전히 자발적인 듯한 운동도 실제로는 기층에서 초보적이거나 마 조직되는 것이라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당연하게도 홍콩 운동 내부에는 의식적인 지도의 요소가 있다.

즉, 상이한 정치 전망을 가진 이질적인 세력과 개인들이 운동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 진보 운동의 노련한 개혁주의자들, 2014년 우산 운동을 계기로 각성한 새 세대 급진 청년들, 제국주의·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서구식 민주주의에 환상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자 등, 이런 세력들의 개입 활동이 낳은 효과로 운동의 방향은 장차 분화될 수 있다.

최근 홍콩 운동 내에서 서방의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좀 더 시끄러워졌다. 9월 8일 일부 시위대가 미국 성조기를 앞세우고 미국 영사관으로 행진했다. 이 행진을 주도한 자들은 강력한 중국에 맞서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배자들의 진영논리에 맞선 나름의 진영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시위 참가자는 평소보다 적었다. 서방 지원 촉구 세력이 운동 안에서 대세를 장악하지는 않은 것이다.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한테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다.

홍콩 운동이 이런 시위가 표방한 지향과 계속 다른 선택을 하려면 혁명가들이 이 운동을 반자본주의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운동에 개별적으로 참가해 온 노동자들이 일터와 거리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도록 고무해야 한다. 단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구들뿐 아니라 경제적·노동계급적 요구들도 제출되기를 고무해야 한다.

서구 지배자들은 홍콩 시위대의 친구가 아니다

조슈아 왕은 2014년 우산 운동의 스타이자 현재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사무총장)이다. 9월 17일 그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이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왕은 독일에 가서 독일 외무장관과 정치인들을 만났다. 거기서 그는 홍콩이 “새로운 베를린”이라고 했다. 냉전 시절에 동서 양 진영이 대치했던 베를린처럼 이제 홍콩도 독재와 (서구식) 민주주의가 대치하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조슈아 왕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서구 정치인들의 지지를 중시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처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독재 대 민주주의’로 오해한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왕

서구 정치인들은 말로는 민주주의·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실제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잔인

하게 짓밟아 왔다. 미국은 독재와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사우디 왕가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다. 영국이 식민 통치한 홍콩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었고, 영국의 홍콩 식민 당국은 중국 못지 않게 정치적 탄압을 자행했다.

서구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운동을 미국이 공작하는 “색깔 혁명”이라고 곡해하는 데나 도움을 줄 뿐이다. 그리고 중국 본토 사람들을 적대하며 홍콩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우파들이 홍콩에서 성장할 여지를 줄 수 있다.

홍콩 운동에 대한 국제 연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서도 서구 정치인들에 의한 가짜 ‘연대’와 서구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진짜 연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진보·좌파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 운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래서 홍콩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한국의 진보·좌파에게도 회피하기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다.

홍콩 운동에 여전히 침묵하는 정치 세력이 더 많다. 정의당 지도부는 3개월 넘게 홍콩 운동에 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홍콩 운동을 지지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외교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민주주의보다 한국 국가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정의당 지도부의

접근법은 그 당 안에서도 특히, 청년당원들 일부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있는 듯하다.

한국 진보·좌파의 일부는 홍콩 운동을 비난한다. 중국이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하는 세력이라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홍콩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자본주의의 특성을 경계하며 홍콩 운동을 지지하기를 꺼리며 침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신비화를 벗겨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100년 전

영국과 독일의 갈등과 성격이 똑같다. 즉, 제국주의적 갈등이다.

지금 홍콩에서 바리케이드의 이편과 저편은 점점 계급 분단선을 따라 정해지고 있다. 대부분이 노동계급 성원인 운동 참가자들이 맞서는 대상은 중국 지배 관료, 홍콩 자치정부, 홍콩 재벌의 동맹이라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국제주의에 비춰 보면, 대다수 진보·좌파가 홍콩 운동에 대한 지지를 꺼리는 것은 국제적 계급 투쟁에 대해 헛갈리는 것이다.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김영익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전진 배치된 게 이번 개각의 특징이다. 과거사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물의를 일으킨 자들이 요직에 새로 기용됐다. 한일 갈등에서 선봉에 선 외무상 고노 다로는 방위상으로 보직만 바꿨다.

내각을 개편하면서 아베는 한일 갈등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체제에서 조금도 바뀌는 것은 없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양보할 때까지 현 강경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이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식민 지배의 경험은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에게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일 패권 전략’ 대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그런데 일부 진보·좌파는 일본의 현 실체를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지위가 취약해지자(이른바 ‘일본 패싱’),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이 한국에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일본을 ‘패싱’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재천명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공세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간주돼야 한다. 아베 정부는 이 과정에 걸림돌이 될 만한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타협을 얻고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압박이 민족적 억압인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강대국 축에는 못 끼긴 하지만 경제 규모 12위 국가다. 특히, 한국이 자본축적의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과거 지배-피지배 관계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 이래 50년 넘게 한국 지배계급과 일본 지배계급은 함께 자본축적과 안보를 이뤄 왔다.

한국 지배계급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제국주의 체제에 기꺼이 편입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도 제국주의 질서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전통적 우파들은 자기 개개인의 전력 때문에 노골적으로 친일 행보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일 행보’도 위선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피아)을 종료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선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대통령 문재인

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데 한국 지배자들이 이해관계를 갖는 이상,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는 언제나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피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뒀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국익(즉, 실제로는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한다. 이 전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화하는 토대이자,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높여 온 요인이다.

다른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을 ‘미·일 패권전략과 한반도 중심의 평화체제 전환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패싱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패권 회복을 도모”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연대가 추동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미·일의 공세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속히 성공하도록 뒷받침하거나,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세력균형 상 “견인”이 공상이라는 점은 제쳐 두기로 하자.)

그러나 이런 견해는 아시아에서 미국·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해 온 역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노동운동이 견인할 수 있다는 모순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또한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진정한 핵심 요인을 놓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양 축으로 한 제국주의 경쟁이 점증하고 있다. 이것이 불안정성을 낳으며 곳곳에서 균열과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트럼프의 대북 접근이 모두 이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 평화의 전인차라는 인식은 주관적 의지의 표현에 가깝다.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조차 실은 주된 플레이어가 아니다.

진보·좌파 일각에선 한국에서 ‘반아베 평화 세력’과 ‘친일 적폐 세력’이 대립한다고도 본다. 이런 그릇된 세력관계 설정 때문에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가고 정부의 대일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미·일 동맹과 그 하위 파트너인 한국의 친제국주의적 협력이 진정한 문제다.

노동운동은 오히려 정부의 친제국주의 협력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문제에서 쟁점 아니라 이런 (제국주의 관련)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에 분명한 반대를 해야 노동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지지라는 계급 협력 노선으로는 제국주의에 맞설 동력도 유실될 수밖에 없다.

“자립적 경제 체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세에 대응해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즉,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진보·좌파는 이를 지지하면서 일본산 불매운동에도 동참한다. 계급을 가로질러 단결해, 일본산 불매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자는 것인데, 한일 갈등을 일본의 한국 경제 ‘침략’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불매운동(모든 불매운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이끄는 문제를 수반한다. 불매운동이 성공적이 된다면 일본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 연관 기업의 한국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양국 자본가들은 경제적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민족주의적 편견을 부추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양국 노동자들은 정서적으로 단절되기 쉽다. 일

본과의 경제관계 변동으로 산업부문에, 기업 간에 변화와 쇄락이 엇갈려 노동자들도 자칫 서로 이반되기 쉽다.

그런데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종속적 경제 체제”를 극복하고 일본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경제 체제”를 쟁취하자고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우선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상이다. 정치적으로도 나쁜 효과를 낳는다. 100년 전에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자립경제)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독립은 정치 투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국경을 넘어 세계 체제로 확립되고 일국의 생산이 다른 나라의 생산에 의존하게 되면서, 제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일국의 경제 자립은 공상이 됐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는 바로 자립경제를 뜻했는데, 1980년대에 그 경제 체제의 파산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오늘날 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화 추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의 세계화 경향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생산과 금융 수준에서 자본이 맺은 다국적 상호의존 관계는 쉽사리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

이런 현실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같은 경제 강국들도 마찬가지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 비율은 84.8퍼센트로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28퍼센트, 프랑스 61.4퍼센트, 독일 86퍼센트로 강대국들도 대외 경제 ‘의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벨기에(164퍼센트), 네덜란드(154.2퍼센트)처럼 100퍼센트가 넘는 주요 선진국들도 있다. 이런 경제들을 모두 종속 경제라고 볼 수 있을까?

노동운동이 수입대체산업화 등의 자

립경제 노선과 재벌 개혁 같은 민주주의(좌파적 포퓰리즘)를 표방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낼지를 생각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나이젤 해리스는 과거 남미에서 좌파들이 수입대체산업화를 지지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했다. “사회주의는 완전히 급진적 민족주의에 의해 포위됐다. 개념들이 묘하게 바뀌게 됐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로 상정한 착취가 이제는 정부 간, 국가 간, 혹은 국가군 간의 관계를 가리키게 됐다. 더욱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동질적 계급으로 돼 “프롤레타리아 나라들”이 “부르주아 나라들”한테 착취당한다는 식으로 됐다.”

노동운동이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립경제 노선을 위해 자국 정부와 일부(흔히 중소) 자본가들과 협력하려 한다면, 노동운동이 착취를 강화하려는 사용자·정부의 노동계약에 맞서 계급투쟁을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그 존재와 존재조건 자체가 국제적 계급인 노동계급의 연대의식도 희석될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그리고 연성 민족주의)을 부추겨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이려 해 왔다. 이것은 노동운동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산화를 위한 비용과 고통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 든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 한 일 갈등에 잘 대응한다고 여긴다면, 이런 문제에서도 노동운동이 제대로 저항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노동운동은 ‘우리’ 경제(한국 국가와 한국 자본주의)를 보호하고자 애쓸 게 아니라 우리 계급의 이익과 의식을 지키고자 애써야 한다. 민족주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해야 제국주의·자본주의에 맞서 노동계급의 단결과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정진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게 핵심 사유다. 그러나 이 영화는 프랑스의 여성 감독 푸리아가 만든 영화로, 전교조 여성위를 포함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교육 자료로 추천한 영화다. 이를 본 일부 학생들이 불쾌했다고 해서 수업이 곧 성희롱일 수는 없다. 수업의 일부인 교사의 발언을 맥락과 떼어 놓고 성범죄 취급하는 것도 큰 문제다.

기자가 광주에서 만난 배이상헌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업자료로 선택한 영상과 화면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실재하지 않으며 뭔가 석연치 않게 학생이 오해하고 혹은 수업의 일부를 왜곡하여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는 해당 수업이 모두 성비위 행위로 다루릴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난감해했다.

교사의 수업 내용, 그것도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교사가 기소될 상황에 처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학교에서 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금기시돼 온 상황에서 가뜰이나 위축된 성(평등) 교육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객관적 실재와 맥락과 무관하게 학생의 '불쾌감'만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직위해제되고 기소될 수 있다면, 어떤 교사들이 성 같은 민감한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려 하겠는가.

배이상헌 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업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형사 사건으로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해 판단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해결 방식에 저를 포함해 전국의 도덕교사들이 놀라움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교육에서 성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교과 교사들이 성에 대한 어떤 언급도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공포를 느끼면서 지금 저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성평등과 학생 인권 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가 졸지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기막힌 상황은 개인의 고초로 끝나지 않는다. 진보적인 교육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또,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롭다.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와 지지자들 9월 17일 시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면피에 급급한 광주시교육청

수업 내용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자기 정당화에 급급하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이 이토록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과 교육청 성인식개선팀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어떤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심지어 혐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직위 해제하고 수사의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신들이 교육부의 학교 성폭력·성희롱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관료적으로 발뺌한다.

실제로 교육부의 매뉴얼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교사를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을 경찰 손에 넘긴 주체는 엄연히 광주시교육청이다. <전남일보> 보도를 보면, 교사에게 '성비위' 혐의가 제기됐을 때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육청 중 광주와 대구 두 곳이라고 한다.

또 다른 진보 교육감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배이상헌 교사의 직위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 매뉴얼 탓만 하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얘기는 면피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이런 식으로 경찰로 죄다 넘길 것이면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광주의 많은 교사들은 그간 광주시

교육청의 스쿨미투 대응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많았다고 말한다. 심지어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려도 광주시교육청은 징계를 해 왔다. 배이상헌 교사와 그 지지자들의 항의를 계기로 과거에 관료적으로 처리한 사건들이 재검토되는 것을 광주시교육청이 두려워한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의 관점?

배이상헌 교사와 광주 안팎의 많은 교사들과 많은 진보계 활동가들이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왔다. 그는 7월 22일 광주시교육청에 첫 항의 방문을 한 이래 매일 교육청 앞 시위를 벌여 왔다. 추석 연휴 뒤에도 이 시위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위를 '2차가해'라고 비난해 왔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 학생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성단체들도 이에 가세했다. 전교조 여성위 간부 일부도 이런 논리로 배이상헌 교사 방어 운동을 비판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배이상헌 교사 방어 활동은 스쿨미투에 대한 보수적 반격이 아니라 부당한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학생의 진술을 진중하게 여긴다는 것과 이를 곧 사안 판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성평등 수업

이 성범죄로 취급받으며 수사받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진보 교육감과 교육청 여성 관료들의 행정은 비판받으면 안 되는 성역인가. 젠더 권력, 교사-학생 권력 관계라는 모호한 얘기로, 사용자인 교육청의 명백한 교사 노동자 억압 문제를 흐려선 안 된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교사가 무조건 침묵하며 자기 반성이나 하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대응이다. 학생들의 자주적 역할을 키우는 것도 아니다. 관료적 행정으로 스쿨미투의 취지를 왜곡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을 벗겨 줄 뿐이다.

강간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는 무고가 드물다(이하 부분 최미진,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참고). 미국의 경우, 강간에 대한 허위신고율이 2~8퍼센트라는 신뢰할 만한 성범죄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92퍼센트의 강간 고소 여성은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극소수의 여성은 강간신고의 경우에조차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경미한 접촉이나 언어 성희롱 혐의라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말은 모욕이나 비하의 함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 다른 동기에도 의해 왜곡되기도 쉽다.

반성폭력운동에서 널리 사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에서 면밀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쉽다. 이

개념의 주관주의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성폭력이 아닌 사건에서도 애먼 사람을 단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관주의적인 용법으로 교사의 '언어 성희롱' 여부를 규정하게 되면, 국가 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십상이다.

2000년대 들어 주관주의적 성폭력 개념이 좌파를 포함해 진보 진영에서 널리 수용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으며 경쟁자들을 고립시키고 조리돌림하는 데 이 노선이 이용돼 온 사례들이 적잖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학교 현장에 진보 교육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는 당선한 지 오래지 않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2011년부터 학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여러 관료적 행정으로 비판받았다. 그래서 장휘국은 현역 교육감이면서도 겨우 2퍼센트 차이로 간신히 3선에 성공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장휘국 교육감의 보수적 행정과 학교 비정규직 해고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런 그가 성비위 교사로 직위해제되고 수사받는 것을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또는 개량주의자였다가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되면서 보수 수구 인자가 된 자가 자기 실체를 은폐하려는 술책을 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방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국가기구의 명백한 교사 탄압이다. 사용자의 노동자억압으로 볼 수도 있다. 검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전교조 지도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교조 대의원의 압도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탄압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성평등 교육이 성범죄로 둔갑한 이번 사태에 경악하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직시하고 교사 노동조합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설 경우 장휘국 교육감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전교조 광주지부 일각에서도 광주시교육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교조 간부 출신이라고 해도 장휘국 교육감은 엄연히 사용자이고, 국가관료이며, 지금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 교사 노동자로서 전교조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감을 느끼기 쉽다.

물론 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절차는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당면 투쟁을 회피한 채 성비위 심의기구 개선이나 매뉴얼 개선만 얘기해선 안 된다.

부당한 교사 탄압에 맞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교육 내용 통제에 맞서는 아래로부터 투쟁 없이 진보 교육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다. 성평등과 진보적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서평 | 《레닌과 21세기》(존 몰리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21세기에 레닌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몇 해 전 [100주년을 맞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 관한 논평이 쏟아지면서 해묵은 논쟁과 논란이 또다시 되살아났다. 러시아 혁명과 그 유산에 대한 해석은 사회 내에서 어느 정치적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뿐 아니라 좌파 사이에서도 제각기 달랐다.

이 시기를 다룰 때 레닌이야말로 단연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레닌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도자이다. 냉전기에 레닌의 이름이 오용된 까닭에, 많은 사람들에게 레닌은 포악한 독재자이거나 훗날 스탈린 체제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 돼 버렸다.

레닌을 그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레닌의 저작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자신들의 선전에 이용한다. 이 때문에 적잖은 좌파들도 레닌의 저작은 21세기에는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심하게 됐다. 존 몰리뉴의 책 《레닌과 21세기》는 바로 그런 의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책에서 몰리뉴는 레닌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려 하기보다는, 레닌주의 정치가 오늘날 정치 지형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려 애쓴다. 몰리뉴는 각 장(章)에서 레닌주의의 핵심 원칙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원칙들에 대한 널리 알려진 비판과 잘못된 해석을 반박한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레닌의 관점부터 레닌주의 정당 이론까지, 몰리뉴는 독자들에게 여러 논쟁을 소개한다. 그런 논쟁들은 복잡하고 혼히는 매우 세세하지만, 좌파에게는 합의가 큰 것이다. 이로써 몰리뉴는 레닌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여전히 의미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혁명적 정치에 필수 요소를 보여 주려 한다.

혁명

몰리뉴는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오늘날 세계의 상태를 개괄하며 이 책을 시작한다. 불평등, 제국주의 갈등, 세계경제 불황, 목전에 닥친 기후 변화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가 낳은 병증(病症)이다. 레닌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주의가 목표이다. 이처럼 혁명적 변화는 레닌 사상의 출발점이다. 몰리뉴는 바로 이 점에서 레닌이 현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레닌이 21세기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러시아 혁명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21세기의 혁명이 노동자 혁명일 것이고 러시아 혁명이 노동자 혁명이었기 때문이다.”(36쪽)

그렇다면 혁명가들이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적용해야 할 레닌주의 정치 원칙은 무엇일까?

노동계급

몰리뉴가 책에서 첫 번째로 검토하는 원칙은 오늘날 노동계급의 중요성이다.

레닌주의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 또한 중요 요소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은 레닌주의 정치의 토대이다.

물론 2019년의 세계 노동계급은 1917년의 노동계급과 무척 다르다. 그 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몰리뉴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노동계급이]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37쪽)고 추산한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마르크스주의 좌파들 사이에서 커지는 것일까?

몰리뉴는 오늘날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세력들을 분해하고 누구에게 체제를 변혁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잠재력”(44쪽)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일탈을 반박한다. 레닌주의 원칙이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몰리뉴가 사용한 이런 유물론적 분석이야말로 그의 주장의 강점이다.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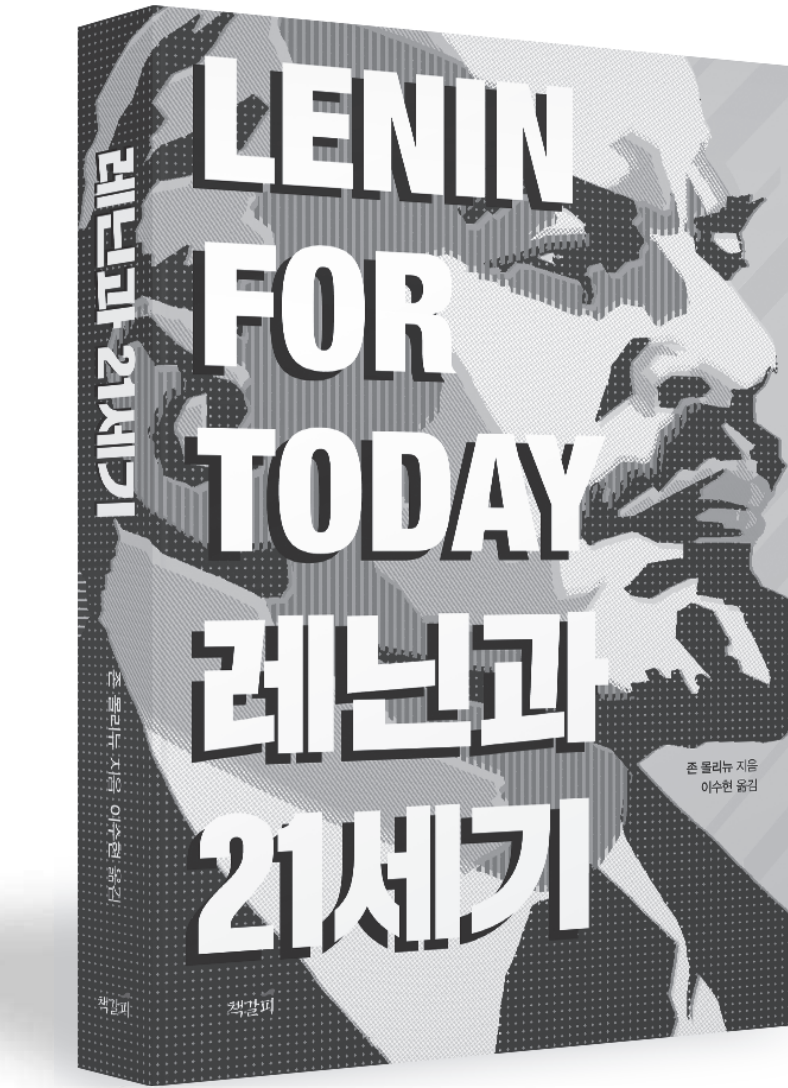
노동계급과 그 경제적 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몰리뉴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레닌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노동자 대중과 관계 맺을 것인가?’ 다시 말해, 레닌주의 정당은 오늘날에도 필요한가? 정당의 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레닌의 정치 실천에 관한 논란에서 큰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레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적 상명하복 식 정당, 논쟁이나 이견 제시의 여지라고는 없는 정당을 연상시키곤 한다.

몰리뉴는 볼셰비키 정당의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에 대한 흔한 이견을 반박하며 볼셰비키당의 성격을 꼼꼼히 검토한다. 이를 다루는 4장(章)의 핵심은, 정당의 구실에 관한 레닌의 관점을 아우르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원칙은 간단히 말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분명하게 헌신하는”(258쪽) 혁명가들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혁명적 정당은 노동계급 대중의 일상적 투쟁에 참가해서 그들과 최대한 가까운 관계를 확립하는 바탕 위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265쪽) 레닌이 보기에 이는 “노동계급 생활의 현실적·일상적 문제들과 우리[혁명적 정당]의 활동을 결합하는 것”(266쪽)



1920년 5월 5일 스베르들로프 광장에서 연설하는 레닌



을 통해 노동계급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뜻했다.

그러므로 레닌주의 정당은 노동계급과 그들의 사회 변혁 능력에 대한 헌신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레닌주의 정당은 혁명가들이 노동자들과 선동·교육으로 이어진 상호관계를 맺는 수단이다.

《레닌과 21세기》는 레닌주의를 다루는 논자들이 흔히 빠지곤 하는 끈구름 잡고 과거에 매몰되는 논쟁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혁명가들에게 레닌주의 이론이 던지는 실천적 의미에 천착한다.

국가

레닌의 이론적 성취는 100년의 세월에도 빛이 바래지 않은 듯하다. 특히, 레닌이 매우 구체적인 맥락에 맞춰 저술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러나 좌파 개혁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지금, 레닌의 저술은 혁명가들이 선거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와 혁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레닌의 가장 유명한 저작이다. 그리고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국가와 혁명》은 제2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주의 ‘수정’이 점점 심각해지던 시기에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를 재조명한 호소력 있는 정치 서적이다. 오늘날 상황은 당시와 비슷한 데가 있다. 급진좌파의 다수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분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며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 분석은 차르 치하의 러시아에나 의미 있지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닌주의적 이해에서 벗어난 이 같은 일탈에 휩쓸린 좌파 정당들—영국의 제러미 코빈 대표 하 노동당과 그리스의 시리자가 그 사례들이다—이 커다란 지지를 얻고 심지어 집권까지 하는 오늘날, 이 논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혁이나 혁명이냐 하는 사회주의 정치의 중대한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몰리뉴는 국가에 대한 레닌주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를 이용해 최근 유로코뮤니즘 정당들의 실패와 아나키즘의 한계를 규명한다. 요컨대, 레닌의 오명을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과 의회의 한계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를 복원하는 것이다.

당연히도 레닌이 1917년에 확립한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기존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계급 지배 기관이므로 노동계급이 그것을 그냥 ‘인수’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분쇄해야 한다.”(249쪽) 다소 이해할 만한 [좌파] 개혁주의 열풍의 와중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정치적 결론을 유념해야 한다.

오늘날의 레닌주의

《레닌과 21세기》는 그저 이론적 논쟁을 다룬 책이 아니다. 이 책은 한 명의 활동가로서 몰리뉴가 혁명적 좌파들에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몰리뉴는 레닌 개인이 아니라 레닌의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레닌주의에 기반한 정치 프로젝트가 부흥하기를 바라서다. 이 책의 마지막 장(章)에서 몰리뉴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이 레닌주의 정치를 21세기에 적용할 몇몇 구체적 방법들을 개괄하려 시도한다.

몰리뉴는 혁명적 정당들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살펴보며, 개중 다수는 “제도화한 종파주의”의 함정에 빠졌다고 인정한다. 레닌주의 정당을 자처하는 조직들도 “노동계급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와중에] …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두려워서”(412쪽) 정치적 순수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고립 상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쇠락의 결과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이지만 좌파의 대다수가 좌파 개혁주의에 이끌리는 오늘날, 몰리뉴는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내릴 필요성을 환기한다. 몰리뉴는 혁명가들이 이를 위해 노동계급의 일상적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대중이 정치적으로 전진하는 곳으로 가서 대중과 함께 투쟁하며 좌경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겠지만, 체제의 급진적 변혁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실제로 이루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시도다.

“기후변화에 대한 야만적 대응을 막기 위해서는, 레닌이 비할 바 없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듯이 혁명적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고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이런 생각을 노동계급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419쪽)

레닌주의자들은 “노동계급 생활의 현실적·일상적 문제들”(266쪽)과 씨름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뒷집지고 논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이 서평은 지면 제약 때문에 차별, 제국주의, 스탈린주의 등 이 책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은 다루지 못했다. 이 책은 혁명가들에게, 특히 초심자들에게 보물창고 같은 책이다. 레닌의 개성과 냉전 시기 흑색선전에 관한 시시비비를 넘어 레닌주의 정치가 발 딛고 있는 핵심 원칙을 재확립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이 책은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 레닌주의 정치를 다시 고찰해야 한다는 실천적 호소다. 이는 레닌의 저작을 그저 되뇌라는 것이 아니다. 정치 환경이 당시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헛된 일일 것이다. 노동계급과 진정 옳은 방법으로 관계 맺고자 하는 혁명 정당을 건설한다는 레닌주의의 기본 목표에서 출발하라는 것이다.



2018년 12월 강릉에서 탈선한 서울행 KTX열차 민영화를 위한 철도 분할은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철도 통합은커녕 민영화 길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9월 10일,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 철도 관제 업무*의 독립성 확보”다. 즉, 철도공사로부터 관제 업무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관제 업무를 맡아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가령, 철도공사가 열차 지연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열차 정시율 수치를 높이려고 열차 지연 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SRT(수서고속철도)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내는 등 자사에 유리하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영화 된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과의 경쟁체제가 놓여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문제는 짚지 않고, 오히려 관제권 분리를 제시했다.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중앙 관제센터는 전국에서 수많은 열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하고 운행 상황을 통제하고 열차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이다. 관제사들은 각 역의 현장 관제원들, 그리고 기관사·수송원·역무원·신호전기원·유지보수 노동자들과 정확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관제권 분리는 이런 통합된 업무 수행,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철도는 열차의 운전과 정비, 선로를 비롯한 철도 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이들을 안전하게 연결해 줄 신호 등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있어야 한다. 철도의 여러 기능은 쪼개면 쪼개질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철도 노동자들과 승객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

선로 보수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열차 운행 정보가 전달됐더라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책임 떠넘기기 하느라 고장 난 신호기가 방치되지 않았더라면, 사상 사고와 탈선 사고와 같은 비극들은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제3의 기관이 관제 업무를 맡는 것은 철도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박근혜 모두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관제권 분리를 시도했었다.

감사원이 지적한 철도공사와 SR의 경쟁 상황이 벌어진 이유도 수서KTX 민영화 때문이다. 민영화 이후 정부는 수익성과 실적 위주의 경영 평가를 시행하며 철도공사와 SR을 경쟁시키고 있다.

내팽개친 철도 통합 공약

문재인 정부는 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의 압력으로 지난 대선 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고,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검토하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올해 초 중단시켜 버렸다.

오히려 지난 4월에는 철도 관제 업무를 주관할 제3의 기관인 (가칭) ‘철도 안전기술원’ 설립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토

부가 발주한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에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철도 관제 업무 분리를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5~2020)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계획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그 밑에 여러 자회사를 두는 방식을 포함한다. 즉, 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을 분할 매각해 민영화를 더 쉽게 하려는 계획이다.

결국 정부는 철도 상하통합(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추진하기는커녕 철도공사에서 관제 업무를 분리해, 철도공사를 경쟁하는 여러 철도회사 중에 하나로 만들고 철도 민영화 과정을 한층 더 진척시키려고 한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공약을 내팽개치고, ‘규제 혁신’을 외치며 친기업 정책을 강화해 온 정부가 ‘철도 통합’ 공약도 나몰라라 하며 철도 민영화의 길을 닦으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도 민영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백은진

용어 설명



철도 관제 업무

열차 운행 계획, 선로 배분, 열차의 제어와 관리, 비상시 응급 조치 등 열차 운행을 제어·통제·감시하는 일. 가령 하나의 선로 위에서 양방향 열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열차 운행을 제어하거나,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선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해 통제하는 일.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정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지·보수 작업에 관해 통제하는 일.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단호한 점거로 연대의 초점이 된 톨게이트 노동자

문재인은 외면 말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하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10일을 넘기고 있다.

9월 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거부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해서도 원래 하던 수납원 업무를 줄 수 없다고 밝혀, 노동자들은 점거에 나선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300여 명은 추석 명절 내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점거를 이어 갔다. 건물 밖에도 조합원 150여 명이 노숙하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위에서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태풍과 매연을 견디며 투쟁 중이다. 16일부터는 청와대 앞 농성도 재개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 노동자들도 농성에 함께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인 노동자들이 경찰 위협과 침탈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하자 연대와 지지가 크게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 본사 주변에 걸 현수막 신청을 받았는데 반나절 만에 노동조합·단체 등 258곳이 신청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른 부문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청와대에 책임을 물으며 정규화하는데도 문제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9월 3일 민주노총 면담에서, 톨게이트 문제에 대해 조만간 정부 협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뭐라도 내놓을 것처럼 하더니 조국 임명 후 (도로공사가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장 연행을 각오하고 점거를 사수하고 있는 노동자들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했는데도) 막 입을 썼었다. 결국 시간 끌기였다.

심지어 추석 연휴 직전 경찰은 병력 1000여 명을 투입해 대부분 여성, 장애인인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해산하려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해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고, 광범한 연대 때문에 압력을 받아 일단 무력 해산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도로공사는 기자회견까지 막으며 농성장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누전 수리도 차일피일 미뤄서 일주일 넘게 전기 사용도 어렵다. 부쩍 커진 일교차 속에 대리석 바닥에서 자다 보니 아픈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분노스럽게도 9월 16일 도로공사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도로공사는 1, 2심 계류자는 “개별적 특성”이 달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1500명 모두 마찬가지다.

도로공사는 1, 2심 계류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한시적]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그동안 거부해 온 자회사 전환을 제안하다니, 우롱

도 이런 우롱이 없다.

한시적 기간제 채용도 언제 날지 모르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인 데다가, 1, 2심 계류자 전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성격이 짙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불법점거로 업무방해[가 심각]하므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으러댔다. 도로공사는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경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뒤집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적반하장으로 강요한 도로공사야말로 처벌 대상 아닌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되는 노동자들도 압박하고 있

다. 평생 수납 업무만 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로 청소, 환경 정비 업무를 강요하고, 심지어 타 지역 배치, 순환 근무도 시키겠다고 밝혔다.

원래 자리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싶으면 자회사로 가라는 압박이다. 도로 청소 등은 여성, 장애인이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견디기 힘든 일이다. 타 지역 배치와 순환 근무 운운하는 것도 직접고용하는 대신 노동조건 악화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심보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9월 23일 업무 배치를 위한 소집 절차에 불응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300여 명과 나머지 투쟁 대열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다.

한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남원·순창 지역 국회의원 출마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거물 인사의 출마에 정부의 비호와 교감이 없을 리 없다.

1500명의 삶을 짓밟아 놓고도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위선적인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 방문 당시 김상조는 톨게이트 문제는 공공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복합적 사안이라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는 톨게이트 투쟁의 향방이 다른 비정규직 작업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또한 톨게이트 투쟁을 엄호하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양효영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이시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서울대 당국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 개선을 약속했다.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후 노동자·학생의 항의가 만들어 낸 성과이다.

9월 17일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그간 받아 온 휴게실 개선 요구 서명용지를 학교 당국에 전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참가한 노동자·학생 300명은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하라”, “서울대는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외쳤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서울대 총학생회는 노동환경의 전면적 개선과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9월 2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해 받기 시작했다.

학생 수십 명이 강의실을 누비면서 서명을 받은 결과 서명 인원은 나날이

늘어났다. 청소 노동자들도 연구실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직접 서명을 받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서울대 학생 시위에서도 서명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서명운동에는 서울대 학부생·대학원생 7845명, 교수·강사 153명을 포함해 총 1만 4677명이나 참여했다. 정의당의원 전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서울대 교수인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서울대 당국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7일로 잡히자,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발표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만 내려 대학 당국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고, 제대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그러므로 청소 노동자의 사망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

조국 사태가 한창 뜨거워진 8월 20일야야 노동부는 서울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일부 심각한 휴게실은 폐쇄하고 개선할 것과 서울대 모든 휴게실에 대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학교 당국은 학내 청소 노동자 휴게실 146곳을 전수조사 했다. 노동부의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청소 노동자 휴게실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9월 9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계속되는 투쟁

노동자들은 휴게실 개선이 ‘진작에 뒀어야 할 일’이라며 마땅히 여기면서도, 학교가 개선 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번 개선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전기·생협 소속 노동자들의 휴게실·근무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지하에 석면·분진 등 위해 요인이 가득하고 소

음도 심각한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빠져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서울대 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도 3명이 채 안 되고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을 8명이 함께 쓰고 있다. 여름에는 점심 배식 후 식당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허리를 편다.

그래서 9월 17일 집회와 행진에서 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있었다.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들은 ‘서울대 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대 당국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휴게실 문제뿐 아니라 저임금 해결과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용역·파견 노동자 760여 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직접고용 신분으로 ‘정규직화’됐지만 이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초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으로 기계·전기 부문의 저임금 문제가 일부 개선됐지만, 2019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아직까지도 체결되지 않았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 인상과 명절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또 학교 당국은 기계·전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의 직종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려 한다.

청소·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9월 10일부터 매주 중식집회를 열고 있다. 다음주에는 사흘간 연속으로 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저임금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식당, 카페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사라 베이츠

“환경오염, 빈곤, 인종차별, 식민주의, 절망에 맞선 전면전이 모두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새 책에 실린 그녀의 집회 연설 중 한 대목이다.《불타는 지구 — 그린 뉴딜이 화급한 이유》, 국내 미출간)

이 책의 핵심은 ‘그린 뉴딜’을 요구하는 데 있다. 오늘날 ‘그린 뉴딜’은 기후 활동가들의 핵심 요구가 됐다.

‘그린 뉴딜’은 기후 혼돈에 대처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국가 동원 10개년” 투자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 에너지로 100퍼센트 전환, 교통에서 탄소 배출 제로화(化),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사회 참여 보장, 농업 부문의 오염 감축 등이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이다.

클라인은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거침없이 주장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자유 시장 질서의 규범을 모조리, 그것도 매우 시급하게 어겨야 한다.”

클라인이 보기에 자본주의는 사면초가에 놓였고, 이제 해체시키고 없애야 하는 것이다.

클라인은 극도로 변덕스런 날씨, 해수면 상승, 기후 난민, 더 심각해진 전쟁·빈곤·인종차별을 타파할 사회를 쟁취하는 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어쩌다가 지구에 기후 재앙이 목전까지 닥치게 된 것일까? 클라인은 1980년대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클라인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대중 매체의 헤드라인을 수놓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세계 신자유주의 혁명이 대폭발했다.”

클라인은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가 “엘리트들의 자유 시장 숭배 물결에 파묻혀 버렸다”고 말한다.

“역사적 흐름이 신자유주의로 수렴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기세를 잃었다.”

그러나 문제는 고삐 풀린 특정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체제 그 자체다.

자본주의는 기업주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그들의 노동으로 이윤을 내는 체제다. 부자들에게 지구란 수탈할 수 있는 자원 더미에 불과하다.

개별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끼칠 더 광범한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쟁에서 자기 지분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에너지 기업

들은 확인매장량 이외의 새 유정(油井)을 찾으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같은 자리를 제각기 탐사한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는 합리적이지만, 그들의 행동 전체는 지구적 재앙의 불씨를 당긴다.

그리고 사장들은 자기 회사 중역 회의실 밖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컨대, 화석연료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은 기후 과학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정부 정책에 입김을 넣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돈을 쏟아부어 왔다.

클라인은 화석연료 자본가들을 국가적 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가 급연 정책을 만들 때마다 담배회사 이사들을 초빙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한다. 이런 지적은 ‘그린 뉴딜’의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한다.

권력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조치들을 모두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상원이 조장부터 그린법을 부결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대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겠는가?

클라인은 인종차별, 성차별에 맞선 운동,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린 뉴딜’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그린 뉴딜’ 법이 제정되면 모든 권력자들은 일제히 저항할 테지만, 우리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발 디딘 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클라인의 말은 옳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현 시스템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집단적 의사 결정과 합리적 생산을 토대로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클라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인류라는 종 전체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일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도전해, 자본주의를 인류와 지구의 안전을 기반으로 한 다른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획득과 성장을 추구하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발흥이 기후·환경 재앙에 대한 각성을 억눌렀다는 클라인의 말은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80년대의 “대폭발”은 진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2019년 3월 영국 청소년들의 동맹 휴업 시위 “지구를 구할만한 나이는 먹었다”

이것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즉 물가상승·경기둔화·이윤율 하락이 결합된 위기 후에 나타난 것이다.

이 위기는 그전까지 경제에 대한 당시 수준의 국가 개입을 용인해 온 기업주들에게 재앙을 안겨 줬다.

즉, 그로부터 10년 후 신자유주의가 발흥한 것은 위험한 사상을 가진 고약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탈규제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특정 형태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에 도전함으로써 근본적 변화를 쟁취하려 한다.

그러려면 이 사회의 부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기 위한 대중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참여하는 혁명적 과정일 것이다.

기후 혼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주장과 논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기존 질서에 도전할 만큼 조직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군말 없이 부와 이윤의 원천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 일체에 사력을 다해 반발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무장한 부문, 즉 경찰이 부자들의 지배를 수호한다.

경찰이 항의 시위를 언제나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아니다. 세력 균형에 따라 전술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이 지배자들에게 심각

한 위협이 될 경우,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고 시위대를 구금하고 온갖 법을 총동원해 탄압할 것이다.

필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찰 같은 무장 폭력 집단의 비호 하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지구의 자원을 공유하여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것이다.

기업주들에게 떨어질 이윤이 아니라 더 광범한 사회에 돌아갈 유용성과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생산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선출되고 책임성 있고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주적 기구가 모든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 ‘특별 고문’들, 억만장자 땅부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체제가 아닐 것이다.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활갯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배자를 타도하고 스스로 사회를 조직했다.

불행히도 부자와 권력자들은 결국 러시아 혁명과 다른 곳에서의 혁명 운

동들을 분쇄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경험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회를 운영할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 파업, 프래킹* 반대 캠프, 멸종 반란 점거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운동을 건설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 열의, 경험이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기후 위기를 마땅히 비상 사태로 간주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지식과 현존 기술을 모두 쏟아부어 기후 위기에 대처할 것이다.

클라인의 말처럼, “삶의 미래가 걸려 있을 때 달성하지 못할 것은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2호 번역 장호중

* 이 기사의 전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개정판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조너선 닐 지음 | 20,000원
488쪽 | 책갈피

용어 설명

프래킹

세일가스 추출 등을 위해 고압의 물을 암반층에 주입하는 추출법. 지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